

## 노동존중 없이 전기전자산업의 미래도 없다 노동자 배제하는 현 산업정책 규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금속노조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전자산업의 화려함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희생을 폭로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 지원 중심의 산업정책을 노동존중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정부 역시 연일 천문학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대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특혜 속

에서 정작 이 산업을 일구어 낸 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는 임계점에 달했다” 라고 지적했다.

고은하 부위원장은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노동자들이 무거운 중량물을 혼자 운반하다 골병이 들고 중대 재해가 반복된다. 또한 원청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는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보안이라는 핑계로 적용되는 반도체·배터

리·보세업종의 특례 제도는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소 조항으로 전락했다” 라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전기전자산업의 현실을 알렸다.



김성범 삼성전자서비스 통합지회 사무장은 “현장의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제는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전제품 설치, 수리 분야 위험 직무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안전한 작업 시간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과 법정 안전 교육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이수옥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낸 앰코코리아의 내부는 2026년인 지금 이 순간에도 80년대 군대식 조직 문화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라고 폭로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 즉시 관리자들의 악랄한 ‘탈퇴 미팅’ 이 시작된다. 명백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지만 회사는 당당하다. 반도체 공장은 ‘국가전략산업’ 이자 ‘보세구역’ 이므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안전은 처참하고, 강제 연장근무가 불법이지만 증명할 수 없다. 노동강도가 올라가고 노동환경이 바뀔

때 노동자들의 의견 따위 묻지도 않는다. 수당을 삭감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받을 때도 동의할 때까지 관리자와 1:1 미팅이 계속되고, 안전 교육 서명지 틈에 끼워 넣어 동의자 수를 채우는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증거를 만들 수 없다” 라고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참담한 노동 현실을 증언했다.



금속노조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 안으로 이동해 ‘2026 대정부 요구안’ 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 보장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납품단가 인하 방지 ▲산업기반 유지·노동친화적 산업전환 정책 마련 ▲반도체·배터리·보세업종 특례에 따른 노동권 제약 해소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을 제시했다.

